

삼성전자 총파업 임박... '가처분·긴급조정권' 변수

정부 중재 실패...노동장관 "대화로 해결해야" 입장 가처분신청 법원 결정도 변수...결과 따라 파업 영향

삼성전자 노사에 대한 정부의 중재가 실패하면서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파업 여부를 기를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가처분과 긴급조정권 모두 파업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만큼 노사가 마지막으로 진정성 있게 협상에 나서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가경제 피해로 확산 우려
13일 정부 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진행한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이 중지된 이후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면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30일간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중노위는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손실이 40조원이 넘고, 글로벌 반도체 초호황 속 고객사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이 국가 경제 피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0.7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국내 유가증권시

장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만큼 파업이 한국 자본시장 충격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조건 중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라는 규정에 이번 삼성전자의 파업이 해당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 번 가동이 중단되면 제가동까지 수주가 걸리는 반도체 산업 특성 역시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이라는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에 부합할 수 있다.

△노동계 반발 우려도
그러나 결정권을 가진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정부 개입보다는 대화를 우선하는 입장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질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분조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한 것도 아직은 대화를 시도할 때라는 정부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입장에는 긴급조정권 발동이 헌법상 노동3권과 충돌하며 노동계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긴급조정권 자체도 과거에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다.

지금까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으로 시작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네 차례뿐이다.
△가처분신청 인용돼도 파업 가능
긴급조정권 외에는 삼성전자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론이 변수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노조 쟁의를 멈춰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수원지법은 이날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한 2차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파업 개시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일단 법원에서 사측 요구를 받아들여더라도 총파업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는 어렵다. 가처분 신청이 위법한 쟁의로 한정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 내에서의 총파업은 가능하다.
가처분신청의 골자가 안전 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 및 웨이퍼 변질 방지 등 필요성에 대한 것으로, 이들 업무 관련한 인력으로서 전체의 약 10%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은 여전히 파업을 강행할 수 있다.

노조 역시 "안전 등 필수 업무와 무관한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 결정에 따라 합법적 파업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고 위반 시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 등 책임이 커질 수 있어 노조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는 파업 등

력파도 무관치 않은 부분이다.
노조는 이번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1000명이고, 현재 상황으로는 5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간 마지막 협상 기대
노조가 기일로 설정한 21일까지 8일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여론의 압박 속에서 노사가 물밑 대화를 진행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노사 모두 마지막 협상의 문을 열어 놓는 것도 이번 맥락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노조의 조정 결정 선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역시 사측과의 추가 협상 여지를 기본적으로 담으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오지 않으면 들어볼 생각이 없다"며 여지를 두고 있다.

정부 역시 진정성 있는 마지막 협상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광양경제청 중국 안후이성 과학자 기업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광양경제청은 중국 안후이성 허베이시에서 이차전지 ESS글로벌 기업인 고선테크를 방문, 투자상담을 진행하고 과학자기업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광양경제청과 안후이성 과학자기업가협회는 회원사 대상 GFEZ투자설명회 소개 및 입주기업과 협회회원사 간 기업 교류, 한·중 기업 간 투자유치 상호 협력, 광양만권 투자 시 기업 지원 등을 하게 된다.

'동료'가 된 로봇, '내몰리는' 노동자

인공지능(AI)이 화면 속 대화상대를 넘어 인간의 물리적 노동력을 직접 대체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시대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가 노동 현장에서는 고용 불안과 노동 강도 심화라는 역설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피지컬 AI 시대와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CES를 기점으로 고착화시킬 위험이 크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AI의 인사 결정을 '고위험 영역'으로 분류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반면 한국은 올해부터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됐으나,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인권 침해에 막기에 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기술 도입의 목적을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인간 가치 증진'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I 도입으로 창출된 수익이 노동 시간 단축과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관철 연구위원은 "무분별한 AI 대체는 현장의 숙련 노하우를 단절시켜 결국 기업의 경쟁력까지 깎아먹을 수 있다"며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실질적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abi@gjdream.com

키오스크 도입 후 일자리 11% 증발

'인간 소외' 막을 법적 안전망 시급

으로 AI 기술은 자율 제조 로봇과 휴머노이드 등 실체를 가진 물리적 형태로 급격히 진화했다. 과거 AI가 인간의 보조 도구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산업 현장에서 인간과 공존하거나 아예 인간을 대체하는 '주체적 노동 통제'의 단계로 접어들어 가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 도입이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가 분석한 키오스크 도입 사례를 보면 고용은 11.5% 감소했고 인건비는 5.2% 하락했다. 살아남는 노동자들의 처지도 나가지 않았다. 자동화로 인해 업무 효율이 높아지기는커녕, 기계가 처리하지 못하는 복잡한 민원과 감정 노동이 남은 인력에게 집중되면서 노동 강도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공지능 콜센터(AICC) 도입 이후 시스템 불완전으로 인한 민원은 17.9% 증가했다. 기계가 배어낸

분쟁조정 접수·처리 급증...지난해 대비 17% 증가

공정거래 분야 가장 많아...하도급·가맹사업거래 손 온라인 플랫폼·가맹사업거래 증가...건설 등 감소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플랫폼과 편의점 가맹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분쟁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47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4년 4041건 대비 17% 증

가한 수치이자 지난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분야가 24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하도급거래 1040건, 가맹사업거래 691건, 약관 분야 451건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 분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공정거래 분야 분쟁은 전년(1795건) 대비 35% 증가했으며, 이중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은 440건으로 1년 전보다 32% 늘었다.

조정원은 주택건설 등에서 중공, 착공 물량이 줄어들어 관련 분쟁 또한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올해 고물가·고환율 지속에 따른 경기 둔화로 중소기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분쟁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정원은 분쟁조정 인력 증원,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플랫폼별로는 쿠팡 관련 분쟁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분야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은 691건으로 전년(584건) 대비 18% 늘었다. 이 가운데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분쟁이 24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하도급거래 분야는 전년(1105건) 대비 6%, 건설분야는 전년(660건) 대비 10.2% 감소했다.

후 시차를 두고 실적과 자금조달에 영향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국제 연료가격은 전쟁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전쟁 이전(1월~2월) 배럴당 평균 64.9달러에서 전쟁 이후 3월 128.5달러까지 치솟았고, 4월에도 105.7달러 수준을 유지했다. 환율 역시 같은 기간 달러당 1453.3원에서 1487.4원까지 상승했다.
전기판매수익은 판매량 감소에도 판매 단가 상승 영향으로 소폭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전력 판매량은 139.7TWh로 전년 동기 대비 1.3TWh(0.9%) 감소했지만 판매단가는 kWh당 170.4원으로 0.9%

한전, 1분기 영업이익 3조7842억...전년비 0.8% ↑ 중동발 에너지 리스크 2분기 반영...재무건전성 악영향 우려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3조78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연료가격 급등이 2분기부터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무건전성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의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4조39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45억원(0.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조7842억원으로 306억원(0.8%) 늘었다. 당기 순이익은 2조5190억원으로 1573억원(6.7%) 증가했다.
한전은 이번 실적과 관련해 2월 말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및 LNG 가격 급등 영향이 아직 1분기 실적에는 본격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때문에 향

(0.5%) 올랐다. 이에 따라 전기판매수익은 232조233억원으로 121억원(0.1%) 증가했다.
이처럼 흑자 기조에도 재무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연결 부채는 206조4000억원, 차입금은 128조2000억원에 달했다. 하루 평균 이자비용만 114억원 수준이다.
한전 관계자는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국가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전력산업 전 분야에 AI를 적용, 전력설비와 망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19·27일 업무환경 변화 대응
19일에는 '엑셀 처음 사용자'를 위한 필수 노하우' 교육이 진행된다. 김영욱 강사가 나서 데이터 가공 핵심 기능, AI를 활용한 함수 및 매크로 적용 방법 등을 중심으로 7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7일에는 회계·경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전 사원이 알아야 하는 세무회계 관리 실무 종합 교육'이 열린다. 박은창 세무사가 강사로 참여해 회계 및 세무 기초기업 질세 전라까지 실무 중심 과정으로 구성됐다. 기업 현장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성과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상공회의소, AI·세무회계 실무교육